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해 넘기나...

어제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서 해법찾기 공방
원 지사, 의견 수렴에 '현 공항 확충' 질문 난색
도-도의회 2공항 건설관련 실무협의 난항 전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의견 수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방식과 관련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의견수렴 문항에서 '현 공항 확충'은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향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2면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를 구성하고 9차례에 걸쳐 심층적으로 토론했지만 환경·토목과 관련해 전문가는 없었다"며 "공개적으로는 국토교통부 패널이었던 관계사와 도민행동측의 소음 전문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토론회에 참가한 국토부의 정책관도 '도민의견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어제(16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지사의 '제주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발언은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과를) 예단하는 뉘앙스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15년 당시) 현 공항이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제2공항으로 결정됐지만, 도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

선택해야 한다"며 "다만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A안은 가능하고 B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도민들은 A안을 수용할 것이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말을 종합하면 현 제주 국제공항과 관련해 '향후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에서 '현 공항 확충'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박 의원의 도정질문이 끝난 직후 "제2공항은 추진 여부를 떠나 갈등이 심하니 해결하고 가자는 취지로 갈등해소특위를 구성했다"며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실무협의 사항들이 안지켜지는 것

같다. 지사는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실무협의 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하지 말고 합의사항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여론조사의 방식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설문 문항을 단순화해 제2공항 찬성·반대를 묻는 '1개' 문항만 갖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갈등특위는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 반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과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 여부 등의 문항을 추가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태원기자



원희룡 도지사가 1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박원철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민주당 현장최고위 오늘 제주서 열려 당초 검토 '4·3 유족 면담' 계획은 철거

18일 제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검토했던 제주4·3희생자 유족과의 면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에 앞서 당 지도부는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 일환으로 오후 2시부터 50분간 제주시 소재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자동차 페네티리 산업화센터 방문하는 일정을 수립했다.

이달 초 민주당이 제주현장최고위원회를 수립할 당시에는 지도부가 제주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제주4·3유족회와의 면담이 추진됐었고, 지역균형뉴딜 관련 현장 방문은 오후 일정으로 잡혔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면담 시간은 갖지 않는 것

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해비치 리조트에서 열리는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워크숍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연수 특강에서 강연에 나서며 당내 대권 행보를 펼친다.

당 지도부가 제주4·3유족과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제주4·3특별법 연내 처리 요구에 대한 부담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이후 이어지는 언론브리핑에서 국회가 심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 일정과 관련해 "이번 현장최고위원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제주4·3유족 면담일정을 잡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부미현기자

국회서 완도~제주 해저고속철도 토론회

전남지역 국회의원 주도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호남·제주 고속철도 연장 사업은 연장 178km, 총사업비 24조496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로 계획된다. 1단계로 무안공항~해남~완도를 잇는 고속철도 개설 추진이 논의되고, 2단계로 완도와 제주를 잇는 해저고속철도 연장 계획이 잡혔다.

전라남도과 완도군청은 기존 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고 현시점에서 연륙 교통수단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6년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당사자인 제주도의 입장 표명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증진계획 내년 본격 시행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 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제주도청에서 '제2차 제주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문화 확산과 인권행정 기반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이번 연구용역은 2021년

부터 향후 3년간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정책목표, 과제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본계획에는 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비전인 '평화와 인권의 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제주'를 비롯해 인권의식 고扬 및 인권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

의 인권보호 및 증진, 인권친화적 도시 조성, 인권 추진체계 강화 4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15개와 세부과제 60개도 제시했다.

도는 12월 제2차 인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인권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 퇴임 앞둔 천주교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 인터뷰 9면

www.booyoungyouth.com

Jeju Booyoung Youth Center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
아름다운 자연속에 추억이 머무는 곳

최고보다 최선을, 성공보다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인성, 진로, 놀이,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에 참여, 숙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름다운 환상의 섬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사고와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수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터전!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52-17(중문동)
T. 064-760-5700 F. 064-760-5757